

일본의 新 ODA정책

- 일본정부는 개도국 지원을 위한 新ODA 「개발협력대강」을 책정, 빈곤퇴치에서 민주주의 보급과 평화 구축 분야로 지원 범위를 확대
- 지원 분야와 국가를 확대함으로써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고 한편, 일본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도

□ 일본정부 신 ODA 「개발협력대강」 발표

- 일본정부는 신 ODA(정부개발원조)지침인 「개발협력대강」을 각의 결정('15.2.10)
 - ODA 대강은 '92년에 책정되었고, 이번에 11년 만에 개정을 하면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보다 폭넓게 책정
 - ODA정책을 개정하게 된 배경에는 ① ODA 개발과제의 다양화, 복잡화, 광범화로 협력 분야의 확대, ② 개도국의 개발 현장에서 ODA 외의 자금·활동 역할을 확대하여 연계 필요성 증가, ③ 세계화로 인해 개도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평화·안정·번영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점임
- 최근 중국, 인도 등 ODA 수혜국이었던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정한 ODA 범위를 초월한 대외지원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시켜 가고 있음
 - 일본정부도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원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방침
 - 일본의 개발협력이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

□ 개발협력대강의 주요내용

- 대강에 담은 협력 목적은 「국익 확보에 공헌」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함으로써 대외원조정책이 일본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명문화
- 지금까지의 ODA는 개도국 원조를 통해 빈곤을 탈출시키는 것이 중심이지만, 이번

각의에서 결정된 「개발협력대강」에는 일본의 안전보장이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외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반영

- 민주화, 법제도 정비, 인권 분야에 대한 ODA 활용, PKO와 연계 등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와 ‘13년 각의 결정된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내용도 포함됨
- 일본정부의 지원으로 개도국의 인프라 등 투자 환경을 개선시켜줌으로써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켜 일본경제의 성장으로 연결
- OECD개발원조위원회(DAC)의 기준에 따르면 ODA의 지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들도 추가해서 지원 대상국을 확대
 - 비군사 분야에서 타국군에 대한 지원을 인정, 재해구조나 부흥 등 비군사 분야로 제한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 기존의 ODA대강에서도 군에 대한 지원을 금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인정된 사례가 없었으므로 개도국이 재해를 당할 경우 긴급지원이나 인프라 복구 등 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범위를 확대
 - DAC의 기준은 소득수준이 12,745달러 이상인 국가에 대한 지원은 ODA로 인정되지 않지만 지리적 취약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들은 원조정책을 활용함으로써 관계 강화를 추진
 - * 중동 연안국가들은 국민소득 수준이 높지만 폐기처리 분야에서 일본의 협력을 요청
 - ** 관광 수입이 많은 카리브해 섬나라들은 허리케인 대책이 과제

□ 시사점

- 일본정부는 비군사적 목적으로 한정하여 군에 대한 지원을 인정하였지만, 해상경비 목적으로 제공한 순시선이나 재해대책용으로 제공한 물자들이 전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공여된 자금이나 물자 등의 전용금지 서약을 체결하거나, 지원된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
- 일본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에 유상자금협력(엔 차관)도 적극 제공하여, 개발을 통해 일본기업들의 투자를 확대시킬 방침

- 경제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아프리카 지역의 물류망 정비를 위해 1,000억 엔의 차관을 제공, 케냐의 몸사바 항구에는 컨테이너 터미널을 설치하여 화물처리능력을 향상
 - 몸사바 항구 주변은 경제특구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등 일본기업의 진출이 기대
 - 일본정부는 케냐와 주변 국가를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 등 인프라 정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 시장인 동아프리카에 개발 초기단계부터 관여해 나가겠다는 전략
- 우리나라의 ODA 지원 규모는 일본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을 지원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등 차별화된 개도국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는 '16년에 아시아 국가로서 최초로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의장국으로 선출되는 등 ODA 분야에서 존재감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

<2013년 ODA 지원 실적>

(단위 : 억 달러)

	지출 총액	지출 순액
미국	317.7	308.8
영국	183.4	179.2
독일	162.2	142.3
프랑스	128.8	113.4
일본	225.3	115.8
한국	18.2	17.6

주) 총액=공여액, 순액=(공여액)-(반제액)

자료 : OECD, DAC

<참고자료>

닛케이신문(2015.2.10/11/15), 외무성 보도자료(2015.2.10.)

일본의 신 ODA 개발협력대강(개요) : 별첨

[참고]

일본의 신ODA 개발협력대강(개요)

1. 이념

(1) 개발협력의 목적

- 일본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확보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헌할 목적으로 개발협력을 추진
- 이러한 협력을 통해 일본의 평화와 안전 유지, 번영의 실현, 안정성 및 투명성이 높고 전망하기 쉬운 국제환경의 실현, 보편적 가치에 따른 국제질서의 유지·옹호와 같은 국익의 확보에 공헌
- ODA는 개발에 기여하는 여러 활동의 핵심으로서 다양한 자금·주체와 연계하면서 다양한 힘을 동원하기 위한 촉매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이바지하는 여러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원동력

(2) 기본 방침

가) 비군사적 협력에 의한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헌

- ▷ 비군사적 협력에 의한 세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공헌은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모습을 구현시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 앞으로도 개발협력의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의 조장을 회피하는 원칙을 준수 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공헌

나) 인간의 안전보장 추진

- ▷ 인간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상은 일본의 개발협력의 근본이 되는 지도이념
- ▷ 취약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 초점을 맞춰 보호와 능력 강화를 통해 인간의 안전보장 실현을 위한 협력을 실시
- ▷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인권 추진에 적극적으로 공헌

다) 자조 노력 지원과 일본의 경험과 지견을 포함한 대화·협동에 의한 자립적 발전을 위한 협력

- ▷ 개발도상국의 자발성과 자조 노력을 중시, 자립적 발전을 위한 협력을 실시
- ▷ 인재육성이나 경제사회 인프라 정비, 법·제도 구축 등 자조 노력, 자립적 발전 기반의 구축을 중시
- ▷ 상대국의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이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상대국과의 대화·협동을 중시

2. 중점 정책

(1) 중점 과제

가) 「질적인 성장」과 이를 통한 빈곤 퇴치

- ▷ 약소국은 인도적 관점에서 지원, 취약성에서 탈출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
- ▷ 빈곤문제의 해결은 인재육성, 인프라 정비, 법·제도 구축 그리고 이들에 의한 민간부문의 성장 등을 통한 경제성장의 실현이 필요. 경제성장은 「질적인 성장」(포섭력, 지속가능성, 강인성)이어야 하고, 일본의 경험·지견·기술을 활용하여 이를 지원
- ▷ 이 관점에서 경제성장의 기초 및 원동력의 확보 그리고 기초 생활을 유지하는 인간 중심의 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 등을 실시

나) 보편적 가치의 공유,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의 실현

- ▷ 「질적인 성장」에 의한 안정적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경제사회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
- ▷ 이러한 발전의 전제가 되는 기반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의 공유나 평화롭고 안정되고 안전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지원을 실시
 - **보편적 가치의 공유** : 법의 지배 확립, 바람직한 지배구조의 실현, 민주화 촉진·정착,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 인권의 존중 등
 - **평화·안정·안전한 사회** : 평화 구축, 긴급 지원(재해원조 등), 안정·안전에 대한 위협 대응(해상보안, 테러, 치안유지, 국제공공재 등)

다) 지구차원의 과제에 대응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국제사회 구축

- ▷ 지구차원의 과제는 어느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포스트 2015년 개발 어젠다 등의 논의를 충분히 고려해 국제사회 전체가 지속가능하고 강인한 사회의 구축을 지향

* UN에서 2000년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세계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

(2) 지역별 중점 방침

- ▷ 세계 각 지역(ASEAN, 남아시아, 중앙아시아·카프카스, 아프리카, 중동, 중·동유럽, 중남미, 대양주·카리브)에서 필요성과 특성에 대응한 협력을 전략적, 효과적이고 기동적으로 실시
- ▷ 지역 통합, 지역 수준의 활동, 광역 개발, 연결성 강화 등의 움직임을 고려
- ▷ 개발이 진행 중이라도 여러 개발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들이나, 1인당 소득이

일정한 수준이라도 작은 섬나라 등 특별한 취약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각국의 개발 니즈의 실태나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필요한 협력을 실시

3. 실시

(1) 실시 원칙

가) 효과적·효율적인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원칙

(a) 전략성의 강화

- ▷ 외교정책에 따라 개발협력 방침의 책정·목표설정을 실시
- ▷ ODA나 ODA 외의 자금·협력과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상승효과를 향상
- ▷ 정책이나 사업 레벨의 평가를 실시,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서 적절히 피드백

(b) 일본이 가진 강점을 활용한 협력

- ▷ 민간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 인프라 건설 등의 하드 측면뿐만 아닌 시스템, 인재육성, 제도 구축 등 소프트 측면의 양면에서 일본의 지견과 경험을 종합적·적극적으로 활용

(c)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 참여

나) 개발협력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원칙

(a) 민주화의 정착, 법의 지배 및 기본 인권의 보장에 관한 상황

(b)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을 회피

- ▷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을 회피. 비군사 목적의 개발협력에 군 또는 군에 종사하는 사람이 관계하는 경우에는 ODA 이념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

(c) 군사 지출, 대량파괴병기·미사일 개발 제조, 무기 수출입 등의 상황

(d) 개발에 따른 환경·기후 변동에 대한 영향

(e) 공정성 확보·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f) 여성의 참여 촉진

(g) 부정부패의 방지

(h) 개발협력 관계자의 안전 배려

(2) 실시 체제

가) 정부·실시 기관의 실시체제 정비나) 연계 강화

(a) 관민 연계, 지자체 연계

- ▷ 민간 부문이나 지자체의 자원 흡수, 민간 주도의 성장촉진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추진. 일본의 성장으로도 연결
- ▷ 관민 연계 시, 개발협력이 민간 부문의 우수한 기술·노하우나 풍부한 자금을 개발도상국의 과제 해결에 유용하게 사용하면서 경제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촉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 ▷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이나 지자체,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

(b) 긴급 인도 지원, 국제평화협력과 연계

- ▷ 긴급 인도 지원을 위한 국제기관이나 NGO 등과 연계, PKO와 연계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c) 국제기관, 지역기관과 연계

(d) 기타 도시·신흥국과 연계

(e) 시민 사회 연계

다) 실시 기반의 강화

- ▷ 자금·인적 자원 등 지속적으로 개발협력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을 강화에 따른 필요한 노력을 실시

(a) 정보 공개, 국민 및 국제사회의 이해 촉진

(b) 개발 교육의 추진

(c) 개발협력 인재·지적 기반의 강화